

글로벌 소식 광장

Global Goings~on

주요국의 보건복지 정책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최근 연구 자료를 선정하여 번역 정리한 글임.

Can workfare programs offset the negative effect of unemployment on subjective well-being?, Benjamin Crost

■ Economics Letters, 2016(140), pp.42-47.

본 논문은 근로복지 프로그램이 실업이 주관적 삶의 만족도(subjective well-being)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증 성격을 띠고 있다. 저자는 논문의 서두에서 선행연구는 주로 실업이 심리적 측면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예를 들면, 실업은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며,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며,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입원을 야기하고, 심지어는 자살로도 이끈다는 것이다(Clark et al, 1994, Winkelmann et al, 1998; Kassenboehmer et al, 2009 등 여러 연구). 이러한 영향에 대하여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다음

과 같이 직업이 사회적 지위(social status),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s), 목적 의식(sense of purpose)과 관련이 있으며, 이들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Izard, 1991; Ryan et al, 2000; Ellingsen et al, 2007 등). 따라서 비자발적 실업은 필연적으로 심리학적 비용을 수반한다고 할 수 있다. 심리학적 비용은 바로 소득과 소비를 초과하여 삶의 만족도와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용이다(Frey et al, 2002; Carroll, 2007). 이러한 점은 노동 시장과 복지 정책에 대한 중요한 함의를 담고 있다. 즉 실업의 복지비용은 손실된 결과의 가치보다 더 크고, 실업자들의 삶의 만족도를 고양시키는 측면에서 현금 이전 지출보다 근로복지프로그램과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더 효율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Edlin et al(2009)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세금 공제(tax credit) 도입에 대한 논의에 있어 고용에 대한 심리적 측면의 편익을 인용한 바 있다.

그러나 근로복지 프로그램에 의해 창출된 일자리나 다른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이 심리적 측면에서 실업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오로지 의미 있다고 인식하거나, 사회적 지위를 부여받은, 바람직하거나 가치 있는 특징을 가진 직업에서 심리적 편익을 받기 때문이다(Ellingsen et al, 2007; Ariely et al, 2008). 근로복지 직업은 종종 임금을 충분하게 받지 못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업에 비해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측면에서는 그리 훌륭한 대체재가 되지 못한다고 저자는 언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근로복지 프로그램이 약 30년 이상 독일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있어 주요 역할을 담당하였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방법은 모형 설정을 바탕으로 하여 강건성 검정을 포함한 고정효과 회귀분석이다. 분석의 시, 공간적 범위는 각각 1992-2004년까지, 독일로서, 이는 분석에 사용된 자료가 독일의 사회경제적 패널 데이터(SOEPv27, German Socio-Economic Panel)임에 기인한다.

분석 결과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고정효과 패널 모형 분석 결과 근로복지 프로그램 참여는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실업이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실시한 강건성 검정(robustness tests) 결과를 보면, 모형의 추정치가 비평행 시간 추세나 이전 처리 기간의 관찰되지 않은 충격, 실업에 대한 적응, 지역적 실업률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점을 찾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하면 적극

적 노동시장 정책은 심리학적 측면에서 실업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기타 분석 데이터 및 분석 과정, 분석 결과에 대한 내용은 논문을 참고하면 된다.

Consumption and the extended family

Economics Letters, HwaJung Choi, Kathleen McGarry, Roberty F. Schoeni, 140(2016), pp.34-38.

본 논문은 실증적 연구로서, 대가족 자원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저자들에 따르면, 대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의사 결정이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분석한 실증적 연구가 다각적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한다. Altonji et al(1992)는 이러한 부류의 연구 중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서 대가족 구성원의 소득이 음식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영향력을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 더 나아가 가족 행동에 대하여 근본이 되는 이타심(altruism)에 대해서도 별다른 실증적 근거를 찾지 못했다. 이들은 분석에서 사용된 데이터인 1985년의 소득 동태 패널 자료(PSID: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through 1985)에서 소비 항목이 음식 소비 항목에 국한되어 있는 한계점에 직면한 바 있다. 이에 저자들은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고자 하였다. 즉, 앞선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사용된 PSID가 연속적으로 소비 측정 항목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

한 한계점을 극복하여 더 포괄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소비 항목이(음식료품)에 국한되지 않고 더 늘어난 점은 분석 과정과 결과에 있어 정교함을 더하는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음식이 필수재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느 개인의 소득이 음식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소비 항목에 미치는 영향과 거의 관련이 없다는 점에 기인한다. 저자들은 다음과 같이 Altonji et al(1992)가 언급한 자신들의 연구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대가족의 소득이 음식 소비에 미치는 제한적인 영향은 총 소비에 미치는 영향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연구가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본 연구는 대가족 자원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전 연구인 Altonji et al(1992)가 설정한 이타주의 모형(The altruism model)을 적용하였다. 본 모형은 가문의 자원을 통제하였을 경우, 어느 특정 개인의 자원이 개인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함의하고 있다. 또한 생애주기 모형(lifecycle model)은 개인의 자원이 개인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예측하는 모형이다. 본 연구는 이렇듯 Altonji et al(1992)의 기본적인 모형을 차용하였으나, 더 다양한 데이터를 적용하여 분석 결과의 분석의 정교함을 더한 연구라고 할 수 있겠다.

분석 결과를 이전 연구인 Altonji et al(1992)와 비교하여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들은 1976-1985년의 기간 동안 가문의 소득이 음식 소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존재하지 않음을 밝힌 바 있으나, 저자들은 1999-2011년까지의 소비

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이타주의가 존재하고 있음을 밝혔다. 즉, 대가족/가문 자원은 구성원의 소비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기타 자료와 모형 설정에 대한 내용은 논문을 참고하면 된다.

Financial knowledge and 401(k) investment performance: a case study

Robert Clark, Annamaria Lisardi, Olivia S. Mitchell. December 2015. *Journal of Pension Economics and Finance*. pp.1-24

미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기업연금제도가 DC형 연금제도인 401(k)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그들의 은퇴자산을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 많은 미국인들이 자신의 자산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금융지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금융지식에 해박한 투자자들이 그렇지 않은 투자자들 보다 더 많은 은퇴 자금을 축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은퇴자산의 축적의 차이가 투자포트폴리오의 차이점 때문인지 아닌지 분석해보고, 만약 투자 포트폴리오의 차이라면 금융지식의 차이가 어떤 특정한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401(k)의 가입자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금융지식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통해 금융지식과 투자결과의 관계를 분석

하고 있다.

분석 결과 금융지식에 해박한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과 비교하여 주식을 18%p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초과 수익률에서 한 달에 0.08%가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지식이 높지 않은 그룹과 비교하여 포트폴리오 변동성은 40%정도 높지만, 고유위험(idiosyncratic risk)이 약 38%이하인 것으로 나타난다. 추가적으로 금융지식의 개입으로 인해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변화하는 지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졌다. 다른 요소 통제 하에 주식할당량이 0.66%가 신장되었으며, 월 초과기대수익률은 0.023%가 올랐다. 반면에 고유위험과 변동성에서는 중요한 차이점이 발생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한계점으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먼저 데이터가 401(k)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금융지식의 개입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지만 금융지식이 풍부할수록 401(k)의 가입자들이 보다 더 좋은 은퇴계획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은 부의 불평등이 금융지식에 대한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충해주고 있다. 그리고 투자 선택의 폭이 좁으며, 투자 대상이 아주 저렴한 인덱스 펀드였다는 점이다. 반면에 기업에서 보다 더 복잡한 투자 폭을 제공하고 최소한의 금융지식에 대한 높은 비용의 투자는 중요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런 금융지식의 차이는 은퇴자산의 불평등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Automatic enrolment contribution scenarios post 2017

■ Tim Pike. November 2015. *Pension Policy Institute*. pp.1-20

영국은 2008년 연금법을 통해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인 NEST를 2012년부터 시행하여 2018년까지 점진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그래서 Pension Policy Institute(PPI)는 몇몇의 방식에서 자동적으로 기여금이 증가하는 특정옵션들과 기여금 수준의 변화를 통해 자동 가입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다양한 옵션에 따라 개인과 퇴직 소득의 범위를 모델링하였다. 본 연구는 개인의 측면과 국고 비용, 그리고 잠재적인 행동 영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먼저 개인적 측면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법률은 5,824파운드에서 42,385파운드 사이에 소득 그룹이 최소자동가입기여율이 8%로 증가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시나리오 분석은 위와 같은 그룹의 자동가입기여율이 8%에서 15% 사이에서의 기여율 수준 변화에 따른 결과를 나타낸다. 각각은 적어도 현재 기여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모든 퇴직결과는 적어도 현재 시스템 아래에서 나온 값들이다. 시나리오 분석에서 기여율 증가 요소로 나이, 근속기간, 급여인상, 급여수준을 언급하고 있다. 나이는 나이가 높아질수록 기여율이 증가하며, 근속기간은 남은기간이 길수록 높은 기여율이 측정된다. 급여 인상은 개인의 급여는 기여율 수준의 증가를 투자하는데 사용되어 진다. 마지막으로 급여수준은 기여율은 개인의 소득과 연계되

어 있으며, 소득은 기여율을 정하기 위해 국가평균 소득에 비교된다. 하지만 이러한 상승패턴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매커니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직은 상승 패턴이 근속기간과 연계되어 있어 전체적인 결과보다 낮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상승 패턴이 급여 수준과 연계되어 있을 때 저 소득자는 낮은 기여율을 달성할 것이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국고로 500파운드의 고정 기여를 제공하는 시나리오다. 이 고정 기여는 저 소득자에게 효과가 크며, 연금 기여금에도 크게 작용한다.

국고비용측면에서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금감면이 더 높은 기여율을 야기 시키듯이 국고의 비용은 증가할 것이다. 현재 시스템 상 세금 감면비용은 연간 33억 파운드이다. 또한 기여금 1%를 추가하기 위한 세금 감면비용은 4억 파운드이며, 25%로 자동가입기여율의 증가는 연간 추가 세금감면에 8억 파운드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동가입 기여에 현재의 세금감면비용의 3분의2는 기본요율 납세자가 부담하게 된다.

현재 개인이 아닌 국고가 부담하는 500파운드의 보너스 고정 기여금은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국고는 연간 45억 파운드의 비용이 필요하며, 세금 감면과 보너스의 총 비용은 전체 그룹(5,824파운드에서 42,385파운드 사이에 소득 그룹) 소득의 약 19% 수준이다. 보너스 지급 비용의 약 88%는 기본요율 납세자가 부담하고 총 비용의 80%는 기본요율 납세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며, 이 시스템은 현재 시스템보다 재분배효과가 크다.

마지막으로 잠재적인 행동 영향분석결과이다. 개인의 행동은 다양한 시스템 하에 변화하지 않도록

가정하였다. 기여율 변화는 오프아웃비율에 영향이 있는데 점진적인 변화보다 빠른 변화는 오프아웃비율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기여 보너스는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것은 오프아웃비율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The Labour Market Impacts of Obesity, Smoking, Alcohol Use and Related Chronic Diseases

Marion Devaux, Franco Sassi. 2015. *OECD Health Working Papers*, No. 86, OECD Publishing, Paris.

만성질환과 건강 위험 요인(behavioral risk factor)은 흡연, 과음,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 신체활동부족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고용 전망, 임금,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 연구는 보고 있다. 이런 요소들은 잦은 병가(장기결근도 포함)의 원인이 되며, 이는 노동력의 조기 상실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실직, 노동력 상실, 조기퇴직은 사회복지지출의 증가로 나타나게 된다.

낮은 교육 수준 및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만성질환과 건강 위험 요인이 만연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들이 노동시장에 반영이 되어 사회적 불균형을 악화시키고 있다. 만성질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은 해당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치료비용 보다

중증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실정이다.

질환의 적절한 치료와 예방을 통해 질 높은 노동력의 확보는 상당한 경제적 생산의 증가를 보일 것이다. 만성질환뿐만 아니라 주요 건강 위험 요인(비만, 흡연, 음주)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고용과 노동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오도록 해야 하며, 건강에 있어 사회적 차이를 좁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따라서 만성질환과 건강 위험 요인을 줄이는 것은 건강 정책과 노동, 사회 정책에 있어 주요한 사항이다. OECD 국가는 더 나은 건강, 노동력, 사회복지 성과를 이루기 위해 이런 요인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고용기회, 임금, 생산성, 병가, 조기퇴직, 장애급여 수령의 관점에서 생활에서의 위험인자와 만성질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OECD 국가의 자료를 분석하여 만성질환과 주요 위험인자가 노동시장성과(labour market outcome)에 미치는 증거들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만성질환과 위험인자들은 잠재적으로 노동시장에 해로운 영향을 지니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혼합되어 영향을 미친다. 비만과 흡연은 명백히 고용 전망, 임금, 노동생산성을 손상시킨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과 당뇨는 고용 전망과 임금, 당뇨, 암, 관절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는 낮은 노동생산성을 유발하고 있다. 음주, 암, 고혈압, 관절염은 고용과 임금에 복합적 영향을 미치지만 이는 항상 병가의 증가와 연관되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대체로 경제에 미치는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높은 위험을 지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 전략을 지원해야 한다고 결론을 맺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은 보다 건강하고, 높은 노동생산성을 유발하여 상당한 경제의 생산성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있다.

The quality of demographic data on older Africans

■ Sara Randall, Ernestina Coast. 2016. Demographic Research, 34(5), pp.143-174.

아프리카의 노년층에 대한 적절하고 공정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자료가 요구된다. 현재 아프리카 국가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해 자세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은 고사하고 노년층의 인구 구조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여러 출처로부터 수집된 인구 자료로부터 정확성을 조사하여 아프리카의 노년층을 대표하는 자료의 질을 평가하고자 한다. 인구 자료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Whipple's Index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그리고 고연령 집단에게는 수정된 Whipple's Index를 적용하였다. 해당 측도를 산출하기 위해 아프리카 17개 국가의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s(DHS)와 이중 12개 국가의 인구조사(census) 그리고 에티오피아와 니제르의 Living

Standards Measurement Study(LSMS)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로부터 얻은 연령별, 성별 분포를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연령별 성비를 비교 분석하였다.

인구 자료의 질은 남아프리카 지역을 제외하고는 매우 좋지 못했으며, 특히 노년층의 자료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두드러졌다. 일부 사헬 지역 국가의 DHS 조사에서는 노년층 여성들에 대한 조사가 상당 부분 누락되어 이루어졌다. DHS와 인구조사에 의해 생산된 노년층의 연령별, 성별 인구구조 자료는 모순되어 있다.

다른 분야에서의 방법론적 접근은 아프리카 노년층에 대한 모순된 자료를 생산하게 한다. 남아프리카 지역을 제외하고 노년층에 대한 기본적인 인구구조조차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용 가능한 자료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연

령과 관련된 건강과 복지, 시공간에 따른 발전에 대한 어떤 결론들은 잠재적으로 타협이 된다. 이는 인구 자료에 의존하거나 수요, 기금과 관련된 정책 입안자와 실무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노년층의 인구 자료에 대해 잘 알려진 문제점들 외에도 많은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자료의 특성으로는 인구 자료의 자세한 분석을 시행하기에는 많은 제한이 따른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자료의 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자료를 사용하여 비교연구로부터 결론을 이끌어 내야하며, 다른 출처의 자료에 대한 복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사헬 지역 국가의 조사에서 이루어진 자료의 문제점들은 미래의 자료 수집에서 고심되어야 할 부분이다.